

연구총서 2002-26

•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회문화 공동체형성은 통일이후까지를 포괄하는 장기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양자관계 개선 노력만으로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동시에 체제이질성과 사회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스스로 고양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사회문화통합

넓은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은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통합은 남과 북 어느 한편으로의 일방적 수렴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대개의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남한사회자체의 기반형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IMF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의 산업화는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 동시에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문화의 정상화과정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와의 결합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남과 북 자

체내의 일련의 변화를 포함하는 과정적, 미래적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상의 구조적 모순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사회통합수준의 경우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정성은 주로 정권의 안정성과 동일시되어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이 정착하면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사회통합과 체제의 안정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 사회통합수준은 정치 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부문을 제외한 분야의 통합수준이 낮은 것이 단기간에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요소의 미발달과 정치적 저항의 조직화가 가능하지 않은 북한의 상황에서 비정치적 부문의 통합수준 약화는 장기적 차원에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현 단계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위기로 인한 체제 와해기의 초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과정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상이한 체제간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 복잡한 난제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사회문화 공동체라는 이상적 상황의 달성은 제도적이고 단기적인 몇 가지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기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남북한의 실질적 수렴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

다. 또한 궁극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체제이질성에서 기원하는 특성들이 완전히 소멸되기도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정은 일방의 수렴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한 남북한 양자 모두의 창조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궁극적인 통일실현 이전의 중간단계로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의 개념을 구분하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의 완성을 포함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여건조성을 위해 비 정치분야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사회문화공동체가 통일의 ‘한 단계’이자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며, 현실적합성을 가진 통일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본골격과 방향성은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방향 위에서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단계의 구분의 적용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일을 위한 과도기로서 과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화해·협력기와 남북연합기와 마지막 단계

인 통일국가단계는 통일이전과 통일이후라는 기준으로 상호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공동체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 형성이 시작될 수 있으나 완성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없다. 사회문화공동체는 통일국가형성 이후의 일련의 실질적 통합과정을 거쳐서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기존입장은 정치공동체형성 이전 사회문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단계별·분야별 접근을 시도하는 기존의 입장은 각 단계의 달성을 위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에 주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실질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대가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현실적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중시 입장은 이론적으로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용론적 해석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이질성의 해소와 통합상태의 증대는 단순한 교류·협력의 증대와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방식과는 다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할 경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있어 화해·협력기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별 지속기간의 이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입각, 장기적인 화해·협력기와 비교적 단기간의 남북 연합기, 그리고 이 과정에 이어진 통일단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화해·협력기에 상당부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해석할 경우 화해·협력기의 과제는 단순한 남북관계 진전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양 체제간에 내재하는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내적인 문제

들의 해소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향>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의 기본방향은 교류·협력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과 상이한 제도와 내면화된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적인 기반마련이라는 두 차원의 병행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남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의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일기반마련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목표 및 정책의 방향성은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아울러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한사회내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제도적 개선, 물적 기반의 확충, 민간간의 협력관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이 필요하다. 남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강화정책의 경우, 남남갈등 및 냉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인적 인프라의 확대 등의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기 사회문화공동체형성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공동협력기구의 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제의 구축을 지원

하고, 사회문화의 각 분야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율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접촉,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과정이 남북한의 이질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연합기의 경우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시도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는 통일국가단계 이후가 될 것이다.

통일국가단계에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의 방향은 내적 통합 과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완성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북한 지역에 사회문화분야의 포괄적인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제도의 이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적응교육, 그리고 남북한 주민 양자를 포함하는 사회통합형 시민교육체제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은 사회통합과정을 포함하는 ‘통일후 정책(post-unification policy)’의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기본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과거 소수 선별적 인원의 비정기적 남북접촉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와 같은 수시 남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시방북체제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 등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의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확대추세에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물질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협력기금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에 조성된 각종 기금들을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교류·협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분야의 특성상 민간분야가 자율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NGO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정 및 남북 경험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공동체는 이질화가 해소된 사회통합상태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냉전구조하에서 남북한간의 이질화 해소를 위한 사회문화 공동체형성 역시 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형성 기반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향후의 통일정책은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아울러 내적인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개선 자체는 남한내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합의정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북정책추진기반의 강화는 남북 교류·협력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여야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대북정책

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 국민설득을 위해 개방적 대북정책수립체계를 구축하고,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공론화를 지향,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와 상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내적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금기영역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 남북관계발전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및 남남갈등을 중화시키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보수, 진보간의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구조'를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 기반 및 통일역량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교육을 시민교육차원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목 차 -

I. 서론	1
II.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사회문화통합	5
1. 남북한사회의 이질화	5
2. 남북 사회문화통합의 개념	11
3.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주의적 특성	15
III.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26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	26
2. 사회문화 공동체 개념의 재해석	34
IV.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41
1.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향	41
가. 기본방향	41
나. 단계별 추진방향	43
2.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46
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46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	46
(2)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54
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기반 구축	59
V. 결론	63
참 고 문 헌	65

- 표 차 례 -

<표 1>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비교	10
<표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9
<표 3> 공동체 형성 단계	32

I. 서론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현실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패러다임변화에 있어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와 북한의 구조적 위기로 이미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 대립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구도로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지 않은 통일을 유보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전방위에 걸친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간의 소모적 대립구조에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구도를 전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포용정책하에서 남북관계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등 화해를 지향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 및 남북철도연결 등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민간 교류·협력이 제도화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돌발사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부차원의 남북대화와 협력을 위한 협의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채널이 상당부분 구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적합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추진

2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력을 얻을 수 있는 국민적 합의기반구축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장기간 지속된 냉전구조의 해체는 상당한 난제이며, 이는 동서독의 관계 개선과정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의 기본방향위에서 남북관계개선과 아울러 국내적 기반조성을 병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는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는 대북정책 추진에 근본적 제약요인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위에서 정책이 진행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기반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대북정책추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방향성이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 및 비판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경직성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는 지형을 초래했다. 냉전구조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했으며, 적어도 보혁간의 대화가 가능한 타협적 구도를 설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소수정권의 한계를 지닌 현정부의 대북정책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야당과의 협력구도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정쟁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남남갈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수의 정책결정자에 의한 정책결정 및 남북관계의 대형 이벤트를 통한 국면전환이라는 카드에 집착한 반면에 국민적 합의기반구축에 상대적으로 소

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를 노정했다.

이와 같은 평가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정부하에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남한의 신세대 음악밴드가 평양의 극장에서 마음대로 노래를 하고, 북한의 미녀응원단이 아시안게임 내내 화재를 몰고 다녔던 것이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에 중요한 것은 분단보다 장구한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지향형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만으로 상이한 체제가 통합되는 공동체의 형성의 완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와 체제간의 문화접변을 수용할 기반의 구축이 없이 공동체형성은 완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민족공동체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남북양자관계의 개선이라는 단일차원만이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의 내적 변화라는 차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며, 이에 기반한 정책적 대안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통일정책상 남북연합단계에서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평가에 있어, 한반도 냉전체제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화해·협력기에 그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특성상 남북연합단계는 비교적 장기간의 화해·협력기를 거친 이후

4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에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 공동체는 화해·협력기와 남북연합기, 그리고 통일국가단계로 명확히 구별되는 단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통일이후의 내적 통합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장기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통일방안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재검토하고, 현 단계인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 남북의 이질화와 사회통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차원의 현 단계를 진단한다. III장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분석하고, 통일방안과 연계하여 사회문화 공동체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 IV장은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으로서 기본방향과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기초로 현 단계인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제시한다.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남북관계개선방향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기반의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제시될 것이다.

II.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사회문화통합

1. 남북한사회의 이질화

분단으로 인한 장기적인 고립과 단절은 남북한 사회에 상이한 체제와 이념, 생활관습을 형성시켰다. 특히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경험을 가진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체제의 형성이라는 자본주의적 특성과는 다른 형태의 체제적 특성들을 형성시켜왔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체제는 북한주민의 인성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경쟁을 통한 경제행위는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제행위는 자본주의와는 이질적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미미한 것에 불과했다. 장기간동안 사회주의 국민들은 모든 삶이 통제가 되는 체제에 종속되어 왔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인 것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놓여 있었다. 소유와 자원은 국가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인들의 권리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모든 경제적인 결정은 동시에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행정-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기구가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영역에서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자극을 배제하는 것이었고,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주의체제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소련경제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경제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¹⁾ 이와 같은 특징은 사회주의체제에 고유한 특성

들을 형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일상적인 생활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완전고용제도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완전고용과 만성적인 노동력부족현상은 무사안일적 사회주의 노동문화의 형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의 복지체제 역시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구조적인 자극들이 존재했다. 명백한 강제와 이데올로기적인 자극이외에 사회복지제도는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도구였다. 소련과 동구처럼 사회복지체제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농업부분을 포함하는 거의 전 산업,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연금, 의료복지, 주택, 식량보조 등)를 실시했다.²⁾ 사회주의체제의 공동소유제와 완전고용, 노동력 부족, 그리고 복지체제 등의 특성은 사회주의 노동자와 노동문화가 자본주의와 다른 특징을 가지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은 사회주의에 특유한 인성형태를 잉태했다. 소련 학자들에 의한 노보시비르스크시의 조사(1984)는 사회주의체제가 형성한 노동자들의 가장 현저한 결점은 양심, 근면성, 성실, 책임, 신뢰성, 노동에 적합한 기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위험(risk)의 계산 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존형(state-dependent)’이라는 점이며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의존형이라는 특성은 기술연마와 생산성보다는 노동을 기피하는 노동

1) 조한범, “이행하는 사회주의”, 박길성 외,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나남, 1996).

2) Minxin Peix,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pp. 138~140.

윤리와 노동행태,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노동에 대한 경멸, 자주성과 위험(risk)에 대한 무능력과 회피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항상 성취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보다 관심을 두며, 안전은 개인이 지니는 필요의 충족에 대한 전망보다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서 규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주도형 경제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보상은 국가주도형 노동자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직업이 유용하다는 점과 안전을 보장해주며 미리 고안된 계획에 따라서 선택된 몇몇 사회집단들에게 이익과 특권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보호자로 인식된다.³⁾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주민들은 목표의식과 동기부여에서 자본주의체제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주의 주민들의 인성의 이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은 이데올로기의 과도한 억압이었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이데올로기와 이에 기반한 사상교육이 사회의 주요한 원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허위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구성원들을 체제에 통합하고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상부구조로서가 아니라 제도과 사회구조속에서 다양한 양태로 구성원들에게 교육되고 주입되어 일정한 행위의 준거로 기능했다. 사회주의사회의 경우 이데올로기가 구성원들의 행위를 자극하고 사회에 통합시키는 적극적인 기제였으며, 사회제도와 구조 속에서 다양한 양태로 포섭되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행위는 자신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외부로부터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는 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인위적인 기제들을 필요로

3)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 45~46.

했고 사상적, 도덕적 자극과 이를 통한 동원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사회운영의 원리로 기능했다. 행위의 규범과 도덕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구성원들에게 주입, 전달되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책임질 행위자들을 주조해내는 적극적인 수단이자 기제였고, 세계관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상당기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북한사회는 열악한 경제사정상 노동집약적 투입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업화를 달성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에 필요한 대중들의 ‘혁명적 자발성’을 위해서 이념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극하는 동원화가 필요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으로 바로 인민대중을 상정하고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 이데올로기구성의 핵심인 주체사상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가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사회운영원리이자, 총체적인 차원에서 기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구조적인 속성들은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구조적인 특성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존재하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주입되어 형성된 기존의 입장이 일시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이라는 통합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통치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사상사업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구성원들에게 교육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주민들은 체제의 요구가 강하게 투영된 이데올로기를 강제적으로 내면화⁴⁾시키게 되었고, 이는 사회주의의 특성과 결

4) 주체사상은 전지전능한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며,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입은 사고와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함하여 ‘당연시의 세계(taken for granted world)’를 구성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주어진 현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미쳤다.⁵⁾ 즉 사회주의의 공식이데올로기가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면화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특성과 결합하여 독특한 인성체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회’의 자율적인 영역은 극도로 제한되어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이 본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제한되어 있다. 모든 조직은 공적인 것이며 사적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동창회나 친목회와 같은 남한사회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로 이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주민의 이동도 장기간 엄격한 통제체제아래 놓여있었다. 당조직은 사회통제의 핵심으로서 모든 사회조직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계통적인 구조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북한에서 당조직은 중앙당조직, 도당조직, 시·군당조직, 당의 기층조직 그리고 최하조직은 당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당조직을 중심으로 ‘직업총동맹’, ‘문학예술동맹’, ‘기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등의 외곽단체를 육성하여 당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생적 조직의 형성은 개인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문벌주의, 종파주의 등으로 규정되어 금기시된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인민반은 거주지역에서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15-20세대로 구성되는 인민반은 행정제도로서 구성원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각 인민반은 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

된다. 주체사상의 내면화실태에 대한 연구는 주체사상이 북한사회내에서 북한의 주장처럼 효과적인 내면화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내면화되어 있으며, 체제유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병로,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9.

5) 조한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변화전망,” 『현대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 출판부, 1996).

장, 선동원, 그리고 감시원과 감독원을 두고 있다.⁶⁾ 북한에서의 이러한 모든 상황은 지배집단의 배타적 통제를 실현시킬 조직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기반이 될 사소한 조직의 형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사회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체제저항적인 조직적인 성격을 지니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북한주민들에게 남한과 상이한 인성체제를 형성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식의 이질화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남북한 주민의 가치의식 비교⁷⁾

남	한	북	한
<이념적 가치체계>			
시장경제적 가치관 * 개인주의 * 진취성 * 경쟁적 * 자율성		사회주의적 가치관 *집단주의 *수동성 *협동성 *단결성	
<사회적 가치의식>			
*개방성 *개인적 권리 *합리성 *사교성		*독자성(폐쇄성) *조직전체의 이익 *충실성 *열정성	
<선호되는 가치순위>			
1. 행복한 가족관계 2. 편리한 삶 3. 자유 4. 타인의 인정 5. 국가의 안정 등		1. 국가의 발전 2. 평등 3. 편안한 삶 4. 행복한 가족관계 5. 자유 등	

6)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pp. 126~127.

7) 이장호, “남북한 의식구조의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제3회 통일 대비 교육포럼』(한국교육개발원, 1997. 4), p. 11.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은 자율적 ‘시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적 가치와 당의 사상통제, 그리고 유일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신민’들의 형성이 있었을 뿐⁸⁾이라는 평가는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사회주의형 인성은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주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시적으로 완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사회주의적 형태의 근대화 과정을 걸어왔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근대성이 북한체제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차원의 이질화는 남북의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통한 장기적 과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이와 같은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한 이질화과정의 해소와 충격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사회통합의 달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는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상대방의 근대성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내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남북 사회문화통합의 개념

사회문화적 통합⁹⁾을 논함에 있어 우선 이상적 통합상태는 존재하

8) 북한의 신민사회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서울: 나남, 1995), 2장과 4장을 참조할 것.

9) 사회통합, 혹은 문화적 통합으로 나뉘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사회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경제적 이해관계, 지역, 세대차이, 성차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 중의 상당수는 이익집단화하여 제한된 사회적 자원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분단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합개념의 적용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종분리정책을 폐기하기 이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흑백간의 사회문화적 단절로 인한 이질적 사회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분단국 사회통합의 경우 동질적인 민족이 일정기간 상이한 체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한 체제상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통합을 달성한다는 것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강조점도 다르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설명에 있어서 이를 정치, 경제적 측면과 구별되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¹⁰⁾에는 ‘통일문화’로 상징화되는 통합의 문화적 측면이 강조된다.¹¹⁾ 이 경우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회복이 주요과제이며,

10) “사회문화적 통합”과 “사회문화분야”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현재 남북 교류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쓰이는 사회문화분야는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제외하는 나머지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된 문건이나 논문들에 따르면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분야가 주요영역으로 나타나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교류가 포함되기도 한다. 『사회문화공동위수첩』(남북회담사무국, 1995)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추진사례를 열거하면서 주요분야로 출판보도, 학술, 예술, 종교, 체육분야를 들고 있다.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통일원, 1996)는 사회문화분야를 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이외의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아태평화재단, 1995),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5) 등에서도 유사한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

11)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이운죽, “남북한

이를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전통문화분야 등에서의 접촉과 교류의 강화를 강조한다. 정치, 경제제도상의 통합 즉 체제통합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회통합을 설정하는 논의에서는 체제통합의 결과이자 전제로서의 ‘인간통합’을 강조한다.¹²⁾ 이에 비해서 사회통합의 원칙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설정하고, 시민권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 상태를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설정하는 논의는 사회통합의 주요과제로 자산 및 소득격차, 탈 숙련화와 실직, 사회보장문제, 문화적 이질감, 지역생활환경의 붕괴, 이념 및 정치참여문화의 차이점들을 제기한다.¹³⁾ 가장 포괄적인 사회통합개념의 설정은 오페(Claus Offe)의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오페에 따르면 사회의 거시적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의 세 차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¹⁴⁾

사회문화는 개념상 상당히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한다. 우선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의 자체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사회란 “일정한 영역내 구성원들 사이의 유형화된 상호작용의 체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통합론』(서울: 삶과 꿈, 1997).

- 12) 진성우는 동서독의 사회통합과정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체제가 사회주의적 근대화전략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이 서독의 자본주의적 특성과의 통합과정으로 사회통합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동독인들이 서독의 가치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1~44.
- 13) 장경섭, “통일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 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서울: 세종연구원, 1995), pp. 419~455.
- 14) 박형중은 오페의 분류를 이용 남북한의 사회통합상의 기본문제로서 경제-사회적 차원, 제도통합의 차원, 문화정서적 차원을 들고 있다.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128~156.

계”¹⁵⁾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행위 자로서의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구조 등의 단위들이 포함된다. 또한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쓰이는 문화의 개념도 E. B. Tylor가 ‘원시 문화(Primitive Culture, 1871)’에서 이미 오래 전에 언급했듯이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능력이나 관습을 포함하는 복합총체 (complex whole)”라는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회’와 ‘문화’는 인간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총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은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통합은 남과 북의 어느 한편으로의 일방적 수렴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대개의 경우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남한사회자체의 기반형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IMF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의 산업화는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정치적 민주화의 완성,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 동시에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문화의 정상화과정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15) G. Ritzer, et. al., Sociology (Allyn & Bacon, 1979), p. 15.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와의 결합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남과 북 자체내의 일련의 변화를 포함하는 과정적, 미래적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3.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주의적 특성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경험과 이로 인한 사회주의적 특성의 형성은 탈사회주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주의의 공식적 포기를 선언한 국가는 물론 형식적으로 사회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탈 사회주의적 체제변화과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 등 사회주의 발전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탈사회주의적 사회 변화와 사회주의 저발전 상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사회적 변화는 다소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점진적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사회주의적 발전과 공업화의 수준도 구 소련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져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사회주의적 외피 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진행시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게 된다. 고도성장과 도시화, 핵가족화, 소비생활의 비약적 발전 등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이룬 러시아의 경우 체제전환은 근대화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전을 시장경제에 기초한 새로운 특성으로 대체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 해체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가 다른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및 부정적 특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한다. 구체제에서 형성된 수많은 특성들은 새로운 체제건설과정에서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세계의 주인인 러시아인들의 일상적 삶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적 상황 모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발전과 공업화상태는 1978년 중국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의 농업국가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공업화의 단계는 소련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낮았다는 점에서 1991년 말 엘친이 본격적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을 때의 러시아적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이 일정정도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발전정도, 이에 상응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일반적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특성들은 비교적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며, 체제위기과정에서도 본질적 속성들이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 체제위기가 심화되면 사회주의적 특성들은 위기상황에서 본질적 특성들을 온존시킨 채 위기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위기가 심화되면서 시민사회적 특성들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의 내구력을 약화시킨다는 발전론적 혹은 시민사회론적 입장과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체제위기는 시민사회적 특성의 발현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의 특성에 기초한 다른 의미의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체제의 위기 구조 심화와 사회적 변화가 해석될 필요가 있다. 동서독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사회적 불만과 사회주의적 특성의 온존현상은 이와 같은 해석과 그 맥을 같이한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체제전환과정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부터 장기간 형성되어온 구조적 특성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의 몰락 직후 나타난 새로운 요소들은 사회주의시기의 유산을 온존시켰으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필요한 적응력들의 형성을 제약했다. 체제전환기라는 특수성은 새로운 몇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추가시켰다. 첫째로 아노미 혹은 가치론적인 혼돈의 확산과 규범, 가치, 확고한 규칙, 삶의 정당한 방식들에 대한 방향감각 상실현상이 발생했다. 과거가 부정되지만 새로운 대체물들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졌고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둘째로 새로운 부와 권력, 위신의 획득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등장은 ‘야만적인 경쟁(brutal competition)’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경쟁체제에서의 이익은 크지만 아직 ‘게임의 규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확고했던 내적 혹은 외적인 사회통제가 일시에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찰력과 사법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전제주의적 기원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법체계는 권위를 잠식당했다. 마지막으로 서구화의 추구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가져왔다. 국경이 열리자 서구의 가치 있는 생산물들보다 포르노와 마약, 야만성과 신비주의, 조직범죄와 일탈적인 삶의 방식들을 포함하는 저질의 소비자 대중문화가 포스트 사회주의 체

제전환의 사회로 밀려 들어왔다.¹⁶⁾ 장기간의 사회주의가 결과한 특성들이 포스트사회주의를 규정하는 지배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붕괴이후 혼돈된 상황의 부수적인 결과들은 포스트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적응력’들을 온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체제전환의 초기적 과정에 있어 구체제의 특성들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체제전환기 사회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급진적 체제전환의 특성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통제는 급속히 약화되지만 구체제의 특성인 독점화는 약화되지 않으며, 이익집단들에 의한 조합주의적 통제가 나타난다. 이들에 의한 자원분배체제의 통제는 독점화된 부분에 대한 자원의 특혜적 분배와 그렇지 못한 부분의 소외현상을 초래한다. 또한 급진적 사유화는 구체제의 소유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키며, 이 과정에서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은 경제의 지하경제화와 범죄화라는 지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한다. 자율적인 경제주체들의 형성을 목적으로 했던 사유화과정에 대한 구 지배세력들의 개입은 일반주민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제약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체제전환기 사회주의국가들에 특징적인 사회적 측면이 나타난다. 체제전환기의 경제체제의 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침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전면적인 약화와 실업을 야기하며, 범죄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러시아사회에 필연적인 새로운 사회분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층구

16)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6.

조를 구성하고 있던 사회주의의 사회구조가 시장화에 따라 불평등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은 구 사회의 해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의 위기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특성인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소련체제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환경은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의 몇 가지 적응형태를 만들어 낸다. 첫째는 개혁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기업에 기반한 사적인 경제영역으로의 전환이다. 이 형태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은 시장화에 있어 바람직한 요소이나, 시장화에 적응할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매우 제한된 기회로 작용한다. 둘째, 제2경제형태로의 적응이며, 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새로운 대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분배체제의 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재분배체제가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 셋째, 위기관리에 대한 적응형태로서 생존경제로의 복귀가 나타난다. 위기국면 발생시 생존을 위해 가족과 친구관계에 의존하거나 전통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단들에 의존하는 것은 ‘강요된 전통주의(forced traditionalism)’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적응형태는 기존의 생활수준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구체제의 특성에 매달리는 것이다.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시장체제의 도입과정에서 이미 쓸모 없게 되거나 가치가 없지만 임금과 사회보장을 제공해주는 거대한 산업플랜트와 구체제의 제도에 집착한다.¹⁷⁾ 사회주의체제가 자신들에게 보장해주었던 안정성확보에 일차적 목표를 두며, 이는 이들이 사유화에 저항하는 이유가 된다. 이와

17)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7~58.

같은 적응형태는 결국 구체제의 특성들이 체제전환기의 적응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구 러시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북한이 아직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간 의아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상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식량사정의 호전이나, 김정일체제의 안착 등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현 상황은 위기구조의 만성화에 따른 내성의 증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사회통합수준의 경우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정성은 주로 정권의 안정성과 동일시되어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이 정착하면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사회통합과 체제의 안정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정치분야의 경우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안착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권력갈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합의 수준이 비교적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로서의 권력 엘리트도 분화하거나 갈등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정치적 차원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김일성 주석에 비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장악력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 특히 카리스마의 경우 현저하게 약하다는 점은 정치적 통합의 유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 체제의 유지는 핵심적 지지기반의 유지에 기초하고 있다. 식량위기 중에서도

북한의 지배집단과 물리적 억제력을 보장하는 군대와 보안요원,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평양과 인근지역에 대한 배급은 타 분야에 비해 우선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북한사회의 양극화 즉, 상하층간의 갈등구조를 야기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상층부에 대한 적대감형성과 신뢰성의 약화를 의미한다.

경제부문의 경우 통합상태가 낮으며, 부분적으로 이완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가동이 가능한 분야가 군수산업에 국한될 정도로 산업생산분야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산업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에너지위기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관리 분야에 있어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심화로 중앙집권적 경제체제가 와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통제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배급체제가 수년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공식경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며, 지하경제와 생존경제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지하경제와 생존경제의 확산은 다시 공식경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경제부문의 통합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문의 통합수준도 경제부문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의 식량위기는 북한사회통제의 근간이었던 주민의 이동통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다. 식량위기는 생존의 문제를 각 가정의 문제로 만들었으며, 가정 내에서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자식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해체로 연결되며, 북한사회의 기초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량위기는 국유재산의 절취나, 절도, 강력범죄 등 사회적 일탈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했다. 기

아에 직면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북한에서 중국접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북한당국은 현실적으로 엄격한 사회통제를 실시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북자의 급증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재탈북 또는 기획탈북까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당국의 대응력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문화적 통합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생존권이 의심받는 상태에서 충성의 강요와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의심의 증가는 공적권위에 대한 냉소와 부정의식으로 연결될 개연성을 가진다. 시민사회의 부재와 반체제 세력의 체계적 동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시적 체제부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의식구조에는 체제에 대한 냉소와 공적권위의 거부감이 점차 짙어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가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기초를 침식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¹⁹⁾

18) 폐쇄성이 높은 북한체제유지의 핵심은 강력한 사회통제와 국가차원의 폭력적 테러의 활용이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이 과거의 강압적 사회통제에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체제위기의 지표이자 심각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미 중국에서 국제이슈로 비화하고 있으며, 관련 NGO는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탈북’이 지속되는 한 정상국가로서 북한의 위상 확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있어 ‘배출요인’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사회통제를 통한 탈북방지에도 실패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 이송된 탈북자의 재탈북, 또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기획탈북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통제력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지역과 부문을 제외하고는 관리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19) 사회주의의 주입식 교육과 전체주의적인 통제에 대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어유형들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방어유형들은 법률에 대한 무

따라서 북한의 현 사회통합수준은 정치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부문을 제외한 분야의 통합수준이 낮은 것이 단기간에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요소의 미발달과 정치적 저항의 조직화가 가능하지 않은 북한의 상황에서 비정치적 부문의 통합수준 약화는 장기적 차원에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현 단계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위기로 인한 체제외해기의 초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적응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장기간 사회주의적 특성을 배양시켜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들은 정책적인 개혁에 따라서 일시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사회주의가 배양한 특성들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형태로 나타난다. 시장체제로의 체제전환은 제도의 변화와 제도속에서 기능하는 행위자의 변화라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행위자의 의식구조와 행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변화를 내면화시키고 적응하는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체제전환의 성공은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부문인 정치,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이지만 본질적인 보다 심층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동반될 때 가능한 것이다. 상징체계와 사고, 그리고 행위의 변화 등 문화적 차원의 새로운 변화(new habits

시, 규칙에 대한 제도적인 회피, 권위에 대한 불신, 전통에 대한 강조, 서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사회는 겉으로 굳건한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기초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는 탈 사회주의체제의 ‘무혈혁명’적 특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다.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p.15.

of the heart)없이 체제전환의 성공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성공여부는 구체제의 해체의 충격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체제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합리적인 해소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전반적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 과정인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과정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상이한 체제간의 사회적 통합을 달성해야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 복잡한 난제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간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은 북한사회가 하나의 단위로서 특수한 경험을 재생산해온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북한사회의 구조적인 결과물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며, 일정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은 북한이 남한과 다른 사회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질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냉전논리적인 가치판단에 입각한 단기적인 청산의식은 북한이라는 사회적 단위에 고유한 또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진정한 통합은 제도적인 외형상의 통합을 넘어서 사회의 내재적인 동질성을 회복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다양한 분열적 요소를 잠재시킨 겉으로의 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보다 여건이 좋았던 독일의 경우도 동독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된 급진적인 통합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통합은 준비된 통합이어야 하며, 북한이 스스로의 개혁과

20) Piotr Sztompka, Cultural and Civilizational Change,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runo Grancelli, eds., (Walter de Gruyter, 1995), p. 247.

개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는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상황에 북한사회가 스스로 적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일비용의 절감 및 사회의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의 불식과 반대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신뢰감 형성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남북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사회문화 공동체라는 이상적 상황의 달성은 제도적이고 단기적인 몇 가지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기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남북한의 실질적 수렴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체제이질성에서 기원하는 특성들이 완전히 소멸되기도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정은 일방의 수렴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한 남북한 양자모두의 창조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Ⅲ.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

정부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년)을 보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년)의 기본축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와 ‘先 교류 後 통일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1단계인 화해·협력기는 남북화해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적대적 공존에서 화해적 공존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남북한이 상호간의 체제 인정을 통해 분단상태의 평화적 관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²¹⁾

1단계의 주요한 목표인 화해와 협력의 심화는 평화의 제도화 및 통일에 대한 과도적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2단계인 남북연합기는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전제로 남북한이 잠정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평화 및 민족공동생활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면서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구체적 기구들을 설치하게 된다. 사실상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남북연합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형태를 유지하지만,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

21) 통일부, 「2002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2), pp. 44.

성하는 단계로 상정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르면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의 주요과제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의 형성이다.²²⁾ 따라서 실질적인 남북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의 추진이 가능한 시기로 해석되고 있다. 남북연합기에는 사회문화공동체의 완성이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사회문화 분야에서 통일의 기초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인 통일국가의 완성은 남북연합기에서 형성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남북한 완전한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1민족 1국가체제로의 형성을 의미한다.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통일국가의 완성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 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되며, 따라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일이 달성되는 단계로 상정되어 있다.²³⁾

3단계로 이루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형성에 맞추어져 있으며, 남북연합이 형성될 경우 사실상 통일의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현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된 남북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현 대북정책은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북화해·

22) 위의 글, p.44.

23) 위의 글, p.45.

24) 위의 글, p.48.

협력정책은 지리·주권의 통합이 완성되는 통일이 가능한 상황의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남북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통일상황의 추구는 남북한의 장기적 이질화가 진행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상이한 제도와 사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적대적 갈등관계를 형성해온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가 단기간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이 상이한 체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형성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서의 사실상의 통일 상황은 남북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은 남북간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되고 군비축소 및 통제가 실현된 정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된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교류·협력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협력관계가 설정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는 남북한간의 적대감해소와 동질화 과정의 급속한 진전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상황은 남북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일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된다.²⁵⁾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적 특성은 우선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 통일과정을 전제로 화해·협력과정을 통한 실질적 통일기반의 확충과 남북연합을 통한 사실상 통일의 완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적 과정을 통해 완전

25) 위의 글, pp.47~48.

한 의미에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다음의 표로 요약될 수 있다.²⁶⁾

<표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p>○통일의 철학 : 자유민주주의</p> <p>○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 통일*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 <p>○통일의 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p> <p>화해·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어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p>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나,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과도 체제를 설정·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남북 동수 대표)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p>통일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 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 <p>○통일국가의 미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26) 통일부,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2002. 5), <http://www.unikorea.go.kr>

통일방안으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구체화되면서 통일과정으로서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민족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분야별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²⁷⁾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을 기초로 민족공동체의 구체적 실현방법으로는 “비정치분야 위주의 공동체인 경제·사회·문화 공동체와 정치·이념분야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사회문화,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주목하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민족통일’로 규정되고,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국가통일’로 규정된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궁극적인 통일실현(민족공동체 형성의 바탕위에 통일국가를 이루는 실질적인 통일) 이전의 중간단계로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의 개념을 구분하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의 완성을 포함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여건조성을 위해 비정치분야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에 따라서 통일과정으로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사회문화공동체가 통일의 ‘한 단계’이자 ‘과

27) 윤덕희·김규륜, 「한민족 공동체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 3.

28) 위의 글, pp. 3~4.

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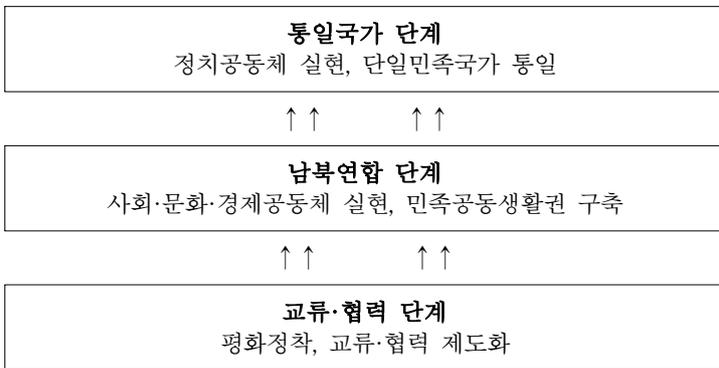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는 “내부에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체계의 차이는 존재하나, 이 차이는 단순한 이질성으로서 배타적·분열적 작용을 하지 않고 상호보완적 관계아래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양 사회의 이질화 현상이 완전히 동질화를 획득하게 되는 상태에서보다는 상호 협력, 공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이 해석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의 사회문화의 제 기능들이 상호 양립 및 절충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정은 양 체제간에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문제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동질성의 증대는 결국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증대문제와 같게 된다. 사회문화,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민족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족생활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분야별로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실현방법으로는 비정치적인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와 정치, 이념적인 정치공동체를 구분해야 하며,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에 초점을 둔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민족통일이며,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한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국가통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국가통일이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최종적 형태가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형성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경제공동체는 정치공동체형

29) 윤덕희, 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4~5.

성을 위한 사전적 과정으로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공동체와 이념공동체의 실현이전이라도 민족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동체 형성을 유보할 수 없으며, 사회·문화·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³⁰⁾ 이는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될 수 있다.³¹⁾

<표 3> 공동체 형성 단계



따라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방향도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 직접교류방식보다 제3국을 통한 간접 교류방식으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에 기초, 제3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대회와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에서의 남북인적교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로는 정

30) 윤덕희, 김규륜, 『한민족공동체 구체화방안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3~4.

31) 통일연구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63.

치와 이념적 영향이 비교적 적은 기초과학·순수학문·전통예술·순수예술·민속학 분야 등에서의 자료 교환 및 전시 등을 추진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³²⁾

남북 연합단계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인적 교류 확대와 민간단체 및 지역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민간단체간 공동활동을 확대하고 민간단체간 자매결연과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확대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언론 개방을 통하여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과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북한주민의 민주의식 형성 촉진이 정책의 주요목표로 설정되어 있다.³³⁾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민간단체의 통합, 북한지역의 사회·문화시설 확대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과도기적 심리불안을 치유하고 다원주의적 사회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남북주민간의 화합과 공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국민 교육·홍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남한주민에 대해서도 민족동질성 증대와 통일 후 사회적 갈등 해소, 통일한국의 건설 등을 위한 교육의 실시가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³⁴⁾

이와 같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온 기존의 해석에 따르면 사회문화공동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³⁵⁾

32) 위의 글, pp. 66~67.

33) 위의 글, p. 70.

34) 위의 글, p. 74.

35) 이우영,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 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26~

첫째, 사회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 및 정치공동체와 더불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부분 요소의 하나이다.

둘째, 사회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함께 정치 공동체 구성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정치공동체에 선행되는 이유는 논리적 적합성이라기보다는 분단반세기에 걸친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문화공동체의 구성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정치공동체의 이전 단계에서 시도될 수 있으나, 경제공동체나 정치공동체에 비해서 사회문화공동체의 구성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문화공동체도 남북한 관계의 성격에 영향받을 수 있다.

일곱째,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은 단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증진과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는 핵심적인 의의를 지녀왔다. 따라서 통일의 각 단계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구체적인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구체적 방법론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2. 사회문화 공동체 개념의 재해석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며, 현실적합성을 가진 통일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본골격과 방향성은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방향 위에서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단계의 구분의 적용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공식적 통일이 완성되는 3단계의 통일국가단계는 통일과정이 아니라 통일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과도기로서 과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화해·협력기와 남북연합기,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단계는 통일이전과 통일이후라는 기준으로 상호구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3단계의 경우 통일의 준비과정으로서는 사실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의 준비단계는 화해·협력기와 남북연합기로 구별될 수 있으며, 현 단계는 남북한 사회·문화·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완성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남북연합기를 준비하는 화해·협력기이다.

공동체란 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통합 상태를 의미하며, 차이들이 구조적인 차별로 재생산되지 않으며 차이들이 공동체내의 일상적 생활 및 공동목표달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내의 민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을 하나의 상상된 정치공동체로 상징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앤더슨의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y)”³⁶⁾라는 정의는 상당부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은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며 만나지도 못하지만 구성원간에 존재하는 상호교통(communion)에 의해 상상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민족공동체의 정립에 있어 하나의 주권과 민족구성원

36)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윤흥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서울: 나남, 1991), p. 21.

들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내면화시키는 정치공동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에서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제도적 통일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내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민족공동체 역시 이와 같은 총체적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공동체는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사회문화적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와 그 결과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문화공동체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그 형성이 시작될 수 있으나 완성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없다. 사회문화공동체는 통일국가형성 이후의 일련의 실질적 통합과정을 거쳐서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공동체형성과 관련지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남북연합기라는 준비적, 과도적 상태에서 사회문화공동체라는 상황의 달성가능성의 문제이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사회문화공동체는 이념과 정치통합이 완성되는 국가통일이전의 민족통일로 상정되어 있으며,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와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사회문화의 영역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사회문화공동체를 인식하는 기계적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체는 내부구조를 이루는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가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으며, 분야별로 차등적으로 완성되는 단계적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내부구조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관계에 있다. 특히 정치공동체는 공동체가 하나라

는 자의식과 ‘하나를 위한 헌신적 희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치공동체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된 개념으로 사회문화공동체가 형성된다는 해석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기존입장은 정치공동체형성 이전 사회문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족공동체에 대한 단계별·분야별 접근을 시도하는 기존의 입장은 각 단계의 달성을 위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에’ 주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실질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간의 동질성증대가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현실적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협력 중시 입장은 이론적으로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용론적 해석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능주의적 입장은 서로 독립된 두 사회가 교류·협력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문화구조의 우위가 확인될 때 열등한 사회가 우월한 사회로 동질화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나, 사상의 우월성이 체제간의 동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문화변용론은 상이한 문화체제가 접촉과정을 통해 일방, 혹은 양방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화간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문화의 유사성과 통합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들에 입각할 경우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남북 사회문화적 동질성의 증대로 해석되는 것이다.³⁷⁾ 즉 체제간의 접촉과 교류의 증대가 양 사회·문화차원의 동질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가가 양 체제간의 이질성해소와 동질성

37) 윤덕희, 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3.

의 증가로 이어지며 종국적으로 남북사회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판단과 맥을 같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남북 양 체제는 일반적 체제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양 체제는 다른 체제와 다르게 상호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상의 특성을 넘어서 남북한은 동일한 민족적 역사를 공유하나, 분단으로 상대방 존재의 부정을 스스로의 존재의 타당성으로 삼아왔다. 즉 단순한 체제간의 차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부정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왔다는 것이며, 이는 각각의 주민들에 대한 내면화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주입되고 재생산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체제는 일반적인 체제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이질성의 해소와 통합상태의 증대는 단순한 교류·협력의 증대와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방식과는 다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문화공동체형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자체적 해소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와 상이한 근대화 경로로 걸어왔으며, 한국전쟁과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해왔다.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냉전구조의 남북한 사회내의 내면화상태인 냉전문화 역시 공고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동질성 증대를 위한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아울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체적 기반의 마련 역시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의 주요과제

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포용정책으로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정책이 남북관계개선에 집중됨으로써 남북관계개선으로 인한 국내적 파급효과와 냉전문화와의 상충, 대북정책 추진기반마련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는 남남 갈등의 부각 및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교류·협력의 증대를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현 통일정책의 기초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 대북정책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을 중심과제로 설정함과 아울러 동시에 상호 이질성을 심화시켜온 체제내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는 반세기 이상의 적대적 상호공존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는 양 체제간의 이질성이 일반적인 체제간의 차이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해석에 있어서 각 단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 양 체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의 특수성과 장기적인 냉전관계의 지속은 양 체제 내의 이질성을 심화시켜왔으며, 이는 주민의식의 내면화과정을 심화시켜왔다. 따라서 남북 양 체제는 체제간의 교류·협력의 확대와 이를 통한 동질성의 증대라는 일반적 과정과는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적용시킬 경우, 첫 번째 과정인 화해·협력기가 남북 연합기와 남북통일단계에 비해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기적인 대립관계와 이를 통한 이질성의 심화과정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준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통일방

안의 이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적용시킬 경우 화해·협력기는 남북연합 및 통일단계에 선행하는 단계이자, 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다. 대립관계의 청산과 화해·협력적 관계의 형성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적인 체제간의 상호수렴관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화해·협력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할 경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있어 화해·협력기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화해·협력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남북연합기는 사실상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공식적 합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3단계인 통일과정으로 이행하는 단기적 과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연합기가 일종의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절차적 의미만을 지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연합으로의 합의는 양 체제간의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차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별 지속기간의 이해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입각, 장기적인 화해·협력기와 비교적 단기간의 남북 연합기, 그리고 이 과정에 이어진 통일단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통합을 위한 전제조건들이 화해·협력기에 상당부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해석할 경우 화해·협력기의 과제는 단순한 남북관계 진전에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양 체제간에 내재하는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체제내적인 문제들의 해소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IV.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1.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향

가. 기본방향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역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으로서 화해·협력단계의 교류·협력과 남북관계개선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각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정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개선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적 상황조건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추진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통일과정은 비단 남북관계개선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을 수용할 자체적인 기반의 강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구체적 추진에 있어서 남북관계개선노력과 동시에 남한사회내의 포괄적인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의 기초는 보완이 필요하다. 즉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남북 동질성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 추진전략과 병행하여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적인 기반마련에 주력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 기존 통일방안에 제시되고 있는 기본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추진전략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있어서 사회문화공동체는 다소 기계적으로 구분되고 해석되어온 경향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를 분

야별로 분류하는 한편 각 공동체형성이 단계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남북연합기에 사회, 문화, 경제공동체형성이 제시되고, 이는 통일국가단계에서 완성되는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전단계로 해석되어 진다. 그러나 사회문화공동체의 속성상 단계적 구분은 개념자체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무리를 수반하고 있다. 사회문화 공동체의 완성은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통일이후의 일정시점에서 달성되는 장기적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는 정치공동체까지 완성되는 통일국가 단계에서 완성될 수 있으며, 이는 통일이후의 일련의 통합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의 기본방향은 교류·협력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과 상이한 제도와 내면화된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적인 기반마련이라는 두 차원의 병행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남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기반의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통일기반마련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일방의 주도에 의한 청산적 방식이 아니라 남북한간에 형성된 근대성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이해와 수렴은 근대성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근대성의 완성은 기존체제로의 수렴이 아니라 미래의 장기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은 체제 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한계를 지닌 북한보다 유리하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나. 단계별 추진방향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기초할 경우 화해·협력기의 정책적 과제도 현재와 다소 다른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현 통일 및 대북정책의 경우 화해·협력기의 주요과제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남북관계개선이며, 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내적 기반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남북한간의 분단과 이질화, 그리고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해온 역사적 경험은 남북 자체내에 공고한 냉전문화를 생성시켜왔다. 따라서 냉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해소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남북관계개선은 기존의 냉전문화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보혁간의 인식차이,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남한사회내의 상이한 반응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냉전문화해소를 위한 남한사회내의 내적인 노력과 남북관계개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감수성의 고양에 없는 상태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목표 및 정책의 방향성은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아울러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기존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위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한사회내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제도적 개선, 물적 기반의 확충, 민관간의 협력관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이 필요하다. 남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을 위한 기반강화정책의 경우, 남남갈등 및 냉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 인적 인프라의 확대 등의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기에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 남북한간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법, 제도적 기구들이 마련, 운영된다. 남북연합기는 통일을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사실상 통일을 위한 기반의 마련이 완료된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문화공동체는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적교류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사회문화의 영역이 정치, 군사 등 외적인 영역들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연동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스스로의 자율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며, 국가연합운영기구들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공동의 협의체 및 회의기구의 형성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남북연합기에는 분야별 공동협력체의 등장과 불특정 다수간의 인적접촉 및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문화접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문화분야에 있어 남북한에 각기 독립적으로 형성, 운영되는 각종 단체 및 협의기구들이 공동협력단계를 넘어서 공동의 협의체들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 제도적 장벽들이 소멸되게 됨으로써 인적접촉 및 왕래의 자율적 공간이 형성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기 사회문화공동체형성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공동협력기구의 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의 각 분야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율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접촉,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과정이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

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연합기의 경우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시도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는 통일국가단계이후가 될 것이다.

통일국가단계는 남북한 통일헌법의 마련과 이에 따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단일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에 있어 남북한간의 사회문화분야는 외형적, 제도적 차원에서 단일한 영역으로 통합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문화공동체형성 과제 및 정책은 사회통합의 완성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내적통합'의 완성을 지향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적 근대화에 따라 형성된 사회주의인성체제와 자본주의적 근대화 및 인성체제와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심층적 문제들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는 체제로서의 생존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자본주의체제와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근대화 역시 본래의 '기획'을 달성하지 못한 반쪽 짜리 근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단계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방식의 근대화의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남북한간 사회통합의 완성과정은 진정한 근대화의 완성노력 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체제로서의 전망을 가지지 못하는 북한을 현 남한자본주의체제에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의 변화를 위한 남북한 모두의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에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의 방향은 내적 통합과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완성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북한지역에 사회문화분야의 포괄적인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제도의 이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적응교육, 그리고 남북한 주민 양자를 포함하는 사회통합형 시민교육체제 등을 포함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정책은 사회통합과정을 포함하는 ‘통일후 정책(post-unification policy)’의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2.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1)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기는 남북한간의 실질적 교류·협력확대를 중요한 목표로 상징해왔다. 사회문화공동체형성과 관련,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남북 교류·협력은 전략적인 의미를 지니고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대북포용정책에 힘입어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적, 질적인 차원 모두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교류·협력 자체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현 단계에서 무리한 통일의 추구보다는 통일의 기초 형성에 주력하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북포용정책은 목표를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3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류·협력사업의 전개는 남북 평화공존 및 공동의 번영을 위한 화해·협력을 지향하며, 대북정책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류·협

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또한 남북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의 실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의 왕래가 큰 폭으로 발전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확대를 명문화, 사회문화교류·협력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³⁸⁾ 남북왕래가 시작된 1989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성사된 남북왕래 총 38,218명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가 35,813명으로 전체의 9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남북협력사업승인의 경우 전체 31건중(2002년 10월말 현재) 현정부 출범이후 28건이 이루어졌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2000년 5건, 2001년 6건, 2002년 7건 등 꾸준한 진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89년 이후 2002년 10월말까지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 2,568명중 현 정부출범이후가 1,993명을 차지하고 있는바, 북한주민의 방문도 점차 활성화되어 남북왕래교류의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제 2차 통일농구대회’를 위한 북한선수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재개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정상회담이 성사된 2000년 10건(706명)이 신청되어 모두 성사되었다. 2001년은 5건 191명이었으나, 2002년의 경우 북한의 아시안게임참가 등으로 12건 1,034명이 남한을 방문했다. 사회문화분야의 남한 방문사례로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공연(2000.5.24-27, 102명),

38) 「6·15 남북공동선언」의 5개항중 제 4항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양교예단 공연(2000.5.27-6.11, 102명),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8.18-8.24, 132명), 제 14회 부산 아시안게임참가(2002.9.28-10.14, 668명) 등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가 전체방문인원의 53%를 차지했다.³⁹⁾

남한주민의 북한방문확대 추세는 사회문화분야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2000년의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방북신청은 102건(949명), 승인 98건(934)명, 성사 79건(674명, 전체방북인원의 9.3%)으로 전년도에 비해 배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⁴⁰⁾. 남북관계진전속도가 다소 위축되었던 2001의 경우에도 701명이 방북하여, 경제분야의 방북(668명)보다 많았으며,⁴¹⁾ 외적 변수가 많았던 2002년에도 1,067명의 방북이 성사되어⁴²⁾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증가 추이를 이어갔다. 남북한간 인적왕래의 증가는 대북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제3국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각종 교류가 평양과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는 데에서 중요성이 있다.

냉전체제와 남북한간의 침예한 정치·군사적 대립구도하에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이거나,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를 빌미로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 또한 냉전체제에서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화해와 협력의 장이 아니라 상호체제선전의 장으로 이용되어왔다. 특히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용했으며 남한의 반공주의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경직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39)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동향 136호」 (서울: 통일부, 2002).

40) 통일부, 「200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1), pp. 119~121.

41) 통일부,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2), pp. 102~112.

42)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동향 136호」 (서울: 통일부, 2002).

작용했다. 남북한간의 대립구조하에서 진행된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⁴³⁾

첫째,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간 교류·협력의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북한 양측의 공식적 입장과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류·협력사안들은 성사되기 어려웠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비정치적 학술분야와 인도적 성격이 강한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냉전체제에 종속됨으로써 주변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⁴⁴⁾ 교류·협력이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셋째, 왕래교류보다는 제3국에서의 접촉이 많았다. 성사된 대부분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대부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제3국의 중개에 의하거나 교포들의 중개에 의해서 가능했으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주체적으로 주최하는 경우가 적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도 제 3국에서 개최되는 관련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43)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44~46.

44) 전체적으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김일성의 사망 등은 남북관계를 냉각시켰으며,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1994년 일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 및 예술축전’과 민예총이 북한민예총과 함께 서울에서 열기로 한 ‘코리아 통일미술전’은 김일성사망에 따라, 북한측이 이를 연기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한 1990년의 ‘제 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북한측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이 문제가 되었으며, 1992년 「노부모고향방문단」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인모의 송환과 포커스렌즈훈련이라는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다.

많았다. 특히 중국의 베이징과 조선족 교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연변지역에서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이 지역이 북한지역과 근접해있어 북한측의 참석이 용이하고, 긴밀한 북·중관계 등으로 북측인사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지역에 한국학 및 북한관련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고, 북한에 해박하거나 인적인 연고가 있는 조선족들이 중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넷째, 대부분의 교류가 협력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주민접촉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91년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몇 건의 협력 사업을 제외하고는 97년말까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이 전무했다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류·협력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진전된 내용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민접촉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남북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남한주민의 방북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특히 1993년의 2건(6명) 이후로는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1999년 12월 북한 농구선수단의 서울방문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북한측이 공세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측의 제의나 요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응하는 수동적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특징은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을 나타냈으며, 남북 정상회담은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정상이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한반도 냉전체제와 남북한의

냉전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다른 특성을 보이며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문화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적교류를 수반한 상호왕래성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상징적 행사들이 성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정체되었던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활성화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 대규모의 공연단과 체육교류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 제3국에서 이루어지던 주민접촉은 점차 남북왕래성 교류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⁴⁵⁾

둘째,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와 이산가족상봉의 증가로 제한된 주민들에게 허용되던 남북 주민접촉 및 방북이 일반주민들에게 확대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수시 방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한 주민들의 관광목적상 방북이 무제한 가능해졌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의 방북이 증가하면서 북한지역에 체류하는 남한주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대북포용정책구사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한 협력사업자 및 협

45) 남북왕래교류가 확대되면서 과거 주류를 이루던 제3국에서의 주민접촉 신청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주민접촉신청은 1999년 8,890건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정상회담이 성사된 2000년 4,890건, 2001년 2,268건으로 현저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북한주민의 왕래가 가능해짐으로써 제 3국에서의 접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부,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2), p. 113.

력사업 승인의 확대추세가 지속되면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태도변화 즉,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대외홍보 구사라는 다목적 실익추구에 기인한 바 크지만,⁴⁶⁾ 향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정착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실리추구적 입장과 아울러 최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외교안보적 차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9년 서해에서의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며, 금강산관광객 역류사건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다.⁴⁷⁾ 특히 남북정상회담으로 증가추이를 보인 사회문화분야의 방북은 2001년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책과 남북관계진전 속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았으며, 2002년에도 같은 추이를 이어갔다.

다섯째, 남북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아직 한반도에는 냉전구조영향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냉전문화는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양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체제에 기반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8.15 방북단 파문사건

46) 예를 들어, ‘2000년통일음악회’의 경우 북한측에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었으며, CNN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등 북한측으로서는 대외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47) 북한은 1999년 6월 서해교전사태 이후 남한 관계자 방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측은 99년 7월 방북예정이던 국제육수수재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대표의 방북 연기를 요청하면서, ‘일시 난관’임을 명확히 했다. 『동아일보』, 1999. 7. 20.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일방적인 중단을 선언하던 북한의 과거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분단이후 337명의 민간 방문단을 구성하여 남북화해를 목표로 치뤄졌던 이 행사는 그 중요한 의의가 진행과정의 문제들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또한 북한의 부산아시아게임 참가과정에서 야기된 인공기계양과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상충된 여론이 제기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며, 유사한 사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남북한에 공고히 존재하는 냉전문화의 한 단면을 확인시켜주었다. 특히 남북 학술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측 소유의 저작권과 관련한 시비와 함께 그 동안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 법적·제도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⁴⁸⁾ 또한 방북의 증가로 북한지역 체류 남한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자율적 토대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보안법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분단 및 냉전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의 저변

48) 고려사와 발해사 및 이조실록 등 북한이 국가적 사업으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제작한 역사관련 학술자료들이 책자와 CD형태로 복제, 남한에 시판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리조실록'에 대한 관권문제의 경우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리조실록'은 북한 당국의 지원아래 북한 사회과학원이 54년부터 착수하여 90년말까지 국역을 완수 400권으로 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남한의 한 출판사가 91년 이를 무단 복제해 시판하자 북한은 91년 10월 항의문을 발송하여 이에 대해 경고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남한측에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리조실록'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내연구가 미진한 역사분야와 한의학, 민속 분야 등에서의 북한저작물의 무단사용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0. 10. 27.

에 자리잡고 있으며, 냉전구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아직 해소되지 못한 냉전구조 위에서 진행되는 민간교류의 취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정부 출범과 아울러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된 1998년을 전후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한층 진전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하는 동시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교류·협력이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및 남북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방기되어 왔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제도적 통일에 앞서 사회통합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한의 냉전문화가 지속되는 한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냉전문화의 해체없이 진행되는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와 아울러 이를 수용할 내적인 기반의 마련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내적인 기반은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냉전문화의 해소, 남남갈등의 해소, 국민적 합의기반의 구축과 같은 중요과제의 해소를 지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제도화

① 제도개선 및 예방조치 완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기본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과거 소수 선별적 인원의 비정기적 남북접촉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시방북체제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보호법 등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교류·협력의 확대추세가 유지될 경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방북자들에 대한 포괄적 신변안전보장 문제이다. 또한 북한주민과의 접촉빈도수가 급증함으로써 체제간의 상이성에 기인하는 제반문제들이 남북 주민간의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남한 주민들의 방북이 급증하게 됨으로써 북한지역에서 남한주민들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⁴⁹⁾ 이와 같은 문

49) 예를 들어 북한과 ‘조선북권합영회사’를 설립, 북한의 인터넷 북권과 주패(트럼프)사이트 운영에 참여중인 (주)훈넷의 관계자들이 정부의 사업불허와 체류기간연장 불허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이의 제기 및 보상요구로 평양을 떠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동·서독간 교류의 경우 상당수의 서독주민들이 동독지역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1965년의 경우 총 330명의 서독주민들이 동독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중 242명은 베를린에서, 75명을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통과도로에서, 나머지 23명은 동독에서 체포되었다. 이는 공식적 통계가 아니며, 현장을 목격한 서독방문객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Reiserverkehr in Deutschland”, Deutscher

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를 통한 제도화의 완성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류·협력체제와 상충의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한 간의 냉전적 관계에 기초하여 성립되었으며, 제한된 주민접촉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직된 형태로 유지되면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남북한간의 대규모 인적교류상황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이 미미한 관계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북한주민의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바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준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전적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정기반 확충

최근 확대추세에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외의 경우 사업성이 보장되면 특별한 지원책이 없어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경제성보다는 남북 이질화의 극복과 사회통합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

Bundestag(5.Wahlperiode): Deutsche V/821 (8. Juli 1966), p. 3,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26~27, 재인용.

화분야가 지니는 공공성의 의미를 감안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에 조성된 각종 기금들을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교류·협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분야의 특성상 민간분야가 자율적인 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상징성과 남북한의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주도와 아울러 사안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한 문화재의 교환전시’, ‘국책 연구기관간 학술교류’ 등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문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여하는 NGO의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와 NGO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⁵⁰⁾ 구체적으로는 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회구성시 민간단체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

50) 조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pp. 20~24;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9월호,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p. 34.

간단체의 대표를 읍저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민간운동의 물질 기반이 튼튼한 서구에 비해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의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부문화가 일반화된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의 경우 대다수의 NGO는 재정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운동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분야의 민간단체도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기부문화의 발달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나 정부의 지원을 다각화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NGO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경우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분야의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NGO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⑤ 북한 개방 및 대북경협사업과의 연계

북한의 개방과정 및 남북 경협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의 효율적 결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일반주민의 대규모 방북을 실현시킴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관광뿐만 아니라 체육교류와 병행됨으로써 여타 사회문화 교류·협력과의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북 진출과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시장체제로의 편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북한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이를 습득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시장경제 및 기술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남한의 관련 학술계의 분야별 학자 및 전문가들을 통해 대북한 경제 및 기술분야 등 시장체제수용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분야별로 북한에 필요한 학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북투자관련기업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학술지원차원에서 학술서적과 기타 교육기자재에 등 관련 자료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기반 구축

사회문화공동체는 이질화가 해소된 사회통합상태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냉전구조하에서 남북한간의 이질화 해소를 위한 사회문화 공동체형성 역시 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형성 기반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향후의 통일정책은 인적교류의 활성화와 아울러 내적인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방북 및 남한방문의 정례화와 제도화에 주력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체제구축과 이산가족 상봉사업적극 추진 등 인적 교류확대를 위

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점차 사회문화 교류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여 사회문화교류협정 및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측이 호응할 수 있는 공동의 협력사업의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학자, 예술인, 학생 및 일반인등 불특정 다수의 방북과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개선과정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수반되는 사회문화적 충격을 흡수하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개선 자체는 남한내의 대북정책추진에 대한 합의정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북정책추진기반의 강화는 남북 교류·협력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개선속도와 비례하여 비판적인 여론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쟁의 소지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 왔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대 국민선언 형식으로 천명하고 국회 및 정치권 차원의 지지를 유도하는 실천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 국민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구들을 설치, 운영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야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인 초당적 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야당과의 협력구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북정책추진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야당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 국민설득을 위해 개방적 대북정책수립체계를 구축하고, 대북정

책 추진과정의 공론화를 지향,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론수렴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 국민설득 체제로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 및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지지유도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집단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대 국민홍보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통일과정에 대한 현실화된 인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남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한 대북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관계개선에 수반되는 사회문화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남북관계발전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와 상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내적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금기영역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 남북관계발전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및 남남갈등을 중화시키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수, 진보간의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구조'를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대립적 대화단절의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두 세력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열린공간'을 제도화하여 갈등을 중화하고,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교육체제의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현 통일교육체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 선발인원에 대한 직접방북교육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은 학교교육 및 취약한 국민교육체제, 교육전문가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교육수요의 급증상황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 및 통일역량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교육을 시민교육차원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을 직접교육기관에서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통일교육관련 종합지원센터로 전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종합시스템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 학교 및 대국민 통일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통합적인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각 지역에 통일교육지원센터 등을 설립, 통일교육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일정책대학원의 설립 등 통일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는 사전대비체제의 강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V. 결론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체제간의 상이성이 해소되어 제도적인 차별이 사라지고 비 모순적 차이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공동체라고 가정할 때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공동체형성은 통일이후까지를 포괄하는 장기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양자관계 개선노력으로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이질성과 사회문화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스스로 고양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체제와 냉전문화를 온존시킨 채 진행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노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 사회문화공동체형성 정책의 방향성은 남북양자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한의 내적인 준비 차원을 포괄해야 하며, 사회문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단계적, 기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문화 공동체형성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정부에서 실체를 나타냈으며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노벨평화상으로 그 노력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의 단초는 이미 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현정부 이전 이미 남북정상회담이 약속되었고, 남한이 건설비의 대부분을 남한이 지원하는 수십억불짜리 경수로 건설에 동의했으며, 대규모의 대북식량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현정부에서 꽃을 피운 대북포용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권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정신은 유지되어야 하며, 계승·발전되어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 특히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화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주요 영역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방법론의 구사를 통해서 통일의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은 이미 독일통일의 경험이 증명한 바 있다. 향후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상징적 대형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실질적인 남한사회의 수용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구축과 실질적인 통일대비, 그리고 남남갈등의 해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남북관계개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남한내의 냉전문화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미 사회주의체제는 전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남한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와 아울러 우리의 안보능력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성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인내’이다. 이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와 통일과정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남한사회의 기반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1. 국 문

- 김문환.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김병로.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학성.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박병석.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아태평화재단, 1995.
- 박형중. “남북한의 사회격차와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 윤덕희·김규륜. 『한민족 공동체방안 연구: 사회·문화·경제 교류·협력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_____. 『한민족공동체 구체화방안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온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 이우영. “사회문화공동체의 개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 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이장희. “남북한 의식구조의 격차와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제3회 통일대비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결성을 통해본 해방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9월호, 서

- 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 장경섭. “통일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 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5.
- 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조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조한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변화전망.” 『현대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 출판부, 1996.
- _____. “이행하는 사회주의.” 박길성 외.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나남, 1996.
- _____.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_____.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 통일부. 『200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1.
- _____.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2.
- _____. 『월간 교류·협력동향 136호』. 서울: 통일부, 2002.
- _____.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서울: 통일부, 2002.
- 통일연구원. 『남북한 실질적 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민족공동체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윤희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

울: 나남, 1991.

2. 영문

Pei, Minxin.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Ritzer, G. et. al.. *Sociology*. Allyn & Bacon, 1979.

Sztompka, Piotr.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_____. "Cultural and Civilizational Change,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Grancelli, Bruno eds..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Zaslavsky, Victor.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Grancelli, Bruno eds..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3. 정기간행물

「동아일보」

「연합뉴스」